

# 郭 泳 教 議 員

“ 서민의 아픔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대전의 블루오션을 찾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

서구 제2선거구 광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박성효 시장님과 미래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대전·충청권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움직임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는 등 우리 대전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회적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칫 소홀히 하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을 등한시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우리 대전의 서민경제를 되돌아보고, 더불어 대전의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서민경제 보호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망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들이 사실상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독점해 오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중소상인들은 경쟁력을 잃고,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다 못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동안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상권을 빼앗기면서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던 골목 영세소상인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점차 나락의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형슈퍼마켓의 취급상품이 동네 골목슈퍼와 전통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완전히 동일한 상품들이어서 대형유통업체보다 골목 영세소상인들에 미치는 피해는 더 큰 실정이며,

대기업의 브랜드 효과, 가격 경쟁력 등으로 주변 중소상권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마저 나타나고 있어, 지역 도소매 유통망이 점차 대기업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를 보면, 중소유통업체 10곳 중 8곳이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선 뒤 영업사정이 현격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앞으로 6개월을 버티기가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특히 '3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한 경우도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실은 지역 중소유통업의 몰락과 함께, 더 나아가 풀뿌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위배되어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변명만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동네 골목슈퍼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형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영업품목 및 시간, 의무 휴일수 등의 영업활동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16건이나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관련 부처의 미온적인 대처와 새로운 사회 쟁점사안들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생업을 포기한 채 원망 섞인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정부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 역시 먼 산 불구경 하듯 뉘 놓고 있으실 겁니까? 시장께서는 지역의 영세소상인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지역 영세소상인들은 그나마 현 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업조정제도’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유성구 신성동, 관평동 2곳에 사업조정신청 요구가 있어 현재 입점중지권고가 내려져 있지만, 이 역시 지역 영세상인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되지 못한, 한낱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라도 지역 영세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영업활동 규제를 위한 상위 근거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냅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해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지역의 영세소상인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용기 있는 결단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의회는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을 채택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및 지역 중소유통상권 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 역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관련법령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시는 근본적으로 지역 영세소상공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에 맞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과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등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자금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자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전시가 동네슈퍼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점포를 체인본부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경영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행여 잘못 관리되어 대형슈퍼마켓으로 변질됨으로써 인근 영세슈퍼에 또 다른 위협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동시에 체인본부에 포함되지 못한 영세슈퍼마켓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과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내외 경제침체 속에서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취약계층과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익과 사회 기여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각종 지원정책들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노동부 인증절차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총 251개로, 이 중 우리 대전은 8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명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노동부 공모 사회적일자리사업 형태의 기업 및 사업단은 21개소(597명 고용)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전국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계	대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제주
251	8	57	13	6	14	12	7	43	15	5	9	8	16	12	18	7

※ 노동부 251개소 / '09. 7. 27 현재



##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연번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사 업 내 용	유형	인증일자
1	(사)엠마오토품스피스회	김창석	무료간병, 재가도우미 등 재가케어사업	혼합형	'07.10.29
2	대전민들레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김조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 제공형	'08.1.7
3	사회복지법인성재원 성제재활자립원	김성수	장애인의 인쇄/실사 및 전자제품 임가공사업	일자리 제공형	'08.7.11
4	(주)야베스공동체	원용호	취업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창업, 그리고 통합 사회를 위한 자활 사업장 야베스공동체	일자리 제공형	'08.10.23
5	(유)행복한 밥상	고혜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혼합형	'08.10.23
6	(주)어울림	이상복	현물급여사업, 사랑의 집고치기사업	혼합형	'08.12.31
7	(유)행복을 나누는 파랑새식품	김승형	도시락 및 영농사업	혼합형	'08.12.31
8	함께하는 세상	양봉석	전통식 장류	혼합형	'09.5.28

※ 노동부 인증 대전시 사회적기업 8개소 / '09. 7. 27 현재

대전시는 '09년 상반기 경제 살리기 합동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실적이 '가' 등급을 받는가 하면, 타 시·도와 차별되게 담당사무관을 사회적기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영업활동 전반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에 있어 우수한 평가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역시 지난 '09.9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을 비롯한 5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여 대전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전시와 우리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범위를 벗어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많아 그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향후 2012년까지 1,0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기업은 현재도 6대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기업수를 나타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약 3.18%(8개 기업)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전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우리 대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사회적기업의 주된 유형은 일자리 제공 목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잘 발달된 유럽의 사회적기업 유형은 30종이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너무 엄격한 법과 제도적 잣대 적용으로 인해 가사 돌봄이,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극히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어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들처럼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모델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전시도 양과 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적기업 유형과 모델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유형과 모델을 파악하고 개발하여, 그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유도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들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정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시 산하 공기업 및 산하기관들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유형 및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립기반이 약한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이 끝나게 되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영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들을 연계시켜 기업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자립기반을 구축하게 됨은 물론,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단체, 개인들이 사회적기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 또는 관심기관들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전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의 **MICE**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제회의나 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을 지칭하는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1세기 국가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MICE산업을 선정하면서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본격적인 산업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대전컨벤션센터를 개관하고,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올 6월 국제컨벤션협회(ICCА)가 발표한 지난해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에서 전 세계에서 111위, 아시아에서 16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제주, 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올 3월에는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선정되는가 하면, 4월에는 MICE산업을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고자 ‘MICE 산업도시 대전’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MICE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이 바로 전시산업입니다. 전시산업은 전시회 개최를 통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컨벤션센터 내에는 본격적인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 【전국 컨벤션센터 전시장 면적 현황】

구 분	COEX (서울)	BEXCO (부산)	EXCO (대구)	KINTEX (고양)	김대중 Center (광주)	CECO (창원)	Convensia (인천송도)
개장년도	'88.9월	'01.9월	'01.4월	'05.5월	'05.9월	'05.7월	'08.9월
전시면적 (증축계획)	36,027m <sup>2</sup>	26,508m <sup>2</sup> (20,000m <sup>2</sup> )	11,616m <sup>2</sup> (12,990m <sup>2</sup> )	53,541m <sup>2</sup> (54,200m <sup>2</sup> )	9,072m <sup>2</sup>	7,827m <sup>2</sup>	8,390m <sup>2</sup>
대전컨벤 션센터와 비교	14배	10배 (22배)	4.6배 (9.8배)	21배 (43배)	3.6배	3.1배	3.3배

반면, 타 지자체들은 전시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고, 기존 전시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KINTEX의 경우 기존 시설에 5만4천평방미터를 더 증축할 계획에 있으며, 부산 BEXCO는 2만평방미터, 대구 EXCO는 1만3천평방미터를 증축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의 현황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타 지자체 컨벤션센터는 대부분 전시시설 중심으로 건립·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곧 회의시설보다 전시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된 행사는 행사기간 동안의 회의장 임대료 수익으로만 그치지만, 전시행사는 회의보다 행사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전시시설 임대비, 참가비, 입장료를 비롯해 장비설치 및 철거기간까지 임대기간으로 산정되어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행사보다 월등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전컨벤션센터는 회의위주 시설로써, 전시장은 전문전시장이 아닌 회의장 겸용의 다목적홀 용도로 건립되어 있으며, 전시장 면적( $2,520\text{m}^2$ ) 또한 타 지자체 전시장 평균면적의 약 1/8 수준에 불과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근에 KOTRA 대전무역전시관( $4,200\text{m}^2$ )이 인접하고 있지만, 운영기관이 다르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전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은 전시장 및 회의시설 부족으로 다수의 국제회의 유치에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례로 7천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2014 세계곤충대회', 6천명 이상 참가하는 '2016 세계고혈압학회', 5천명 이상 참가하는 '2016 아시아안과대회'를 비롯해 '2010 세계한상대회', '2011 세계수학대회', '2012 세계식물병리학회' 등 대전시가 전시장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제회의 도시에 걸맞는 전시장 및 회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대전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발굴하는 차원에서라도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대전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3군사령부를 비롯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정부청사 등이 입지해 있으며,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써 행정 및 국방의 중심도시 기능이 기대되기에 향후 다양하고, 풍부한 회의 및 전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대전컨벤션센터의 전시 및 회의시설 확충을 통해 MICE 산업을 우리 대전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계획과 복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컨벤션센터 인근의 KOTRA 대전무역전시관을 조속히 매입하여 전시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역시 대전무역전시관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조속히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매입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타 시·도 대부분은 전시 및 회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역시 일반회계예산과 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타시·도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여 대전무역전시관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한정된 균특자금으로 대전시가 계획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균특자금을 더욱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통해 전시시설 확충예산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숨 가쁘게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침체된 경제 위기 속에서 소리 없이 고통 받는 서민의 아픔을 등한시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